

수많은 협약들, 체계적 관리로 내실 다져야

의정단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자체나 각종 기관, 기업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과 맺는 이러한 제휴관계는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의 형태로 남게되고 이것을 '협약서'라고 부른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홍보되는 지자체의 업무협약이나 투자협약 사례를 생각하면 된다.

평소 필자는 각종 매체에서 홍보하는 전남도의 협약을 다루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그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의문이 생겼고, 지난 21일 도정질문을 통해 협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7, 8기 전남도가 체결한 협약의 수는 총 1440건으로 이중 기업 투자유치협약이 1041건, 그 외 부서에서 체결한 각종 업무협약이 399건이었다. 전남도는 399건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체결 전 사전 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각 실국과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전남도의 예산과 각종 행정적 의무가 따르는 각종 협약 실적들이 자료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수백

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들도 있었다.

자료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전남도가 일을 게을리하거나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 초에 체결한 협약까지 누락되는 등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협약을 체결한 지도 모르는 상황은 결국 전남도의 관리가 소홀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는 투자협약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전남도가 기존에 제출한 실적은 총 1041건이었으나 도정질문 답변자료에는 1392건으로 319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전남도는 319건이 투자유치과가 아닌 부서와 일선 시·군 등의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제출한 실적 399건 중 투자협약으로 명시한 실적은 7건에 불과하고 1041건에 이미 다른 부서의 투자유치 건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일선 시·군에서 기업과 양자간에 맺은 투자협약을 전남도 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반면 투자유치 실적율은 이전에 비해 괄목상대할 수준으로 개선됐다. 민선 6기 전체 실적율이 약 27%에 불과한데 반해 민선 7기는 63.7%, 민선 8기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8%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투자 실적율 제고를 위한 전남도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적율을 측정하는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투자실현을 판단하는 기준은 '착공(着工)'이다.

즉, 공사가 시작되지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를 협약에서 약속한 모든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실제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관한 실현율은 민선 7기는 56.7%와 49.9%, 민선 8기는 25.6%, 22.3%에 불과한데 전남도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급기준이 착공이라고만 설명한다. 보조금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일 뿐 현실을 반영하는 투자실현 기준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지금이 도정 홍보 수단으로 남발되는 각종 협약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임을 느꼈다. 업무협약 분야와 투자협약 분야별로 체결 전 검증과 사후관리, 의회보고까지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광역 지자체에서 조례로 업무협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협약 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에서도 이를 위해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 기관, 기업 등과 맺는 업무 및 투자협약은 협약서 작성과 이를 위한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협약서에 명시된 공동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중점을 뒀어야 한다. 각종 협약이 단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社說

임기 시작된 22대 국회, 국민의 삶 우선해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 산적해

22대 국회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 8명은 이날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시민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원팀'으로 뭉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적인 이익이 아닌 광주지역 경제 도약과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소명을 가져야 할 22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로 새 출발 하길 기대한다.

여야 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출범했던 21대 국회는 끝까지 정쟁만 일삼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지난 29일까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치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구태가 22대에서 똑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22대 국회가 문을 연 30일부터 여야간 끝 모를 대치 국면이 다시 시작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을 놓고 벌이는

살바싸움도 그대롭다. 국회 원구성 협상마저 가시밭길이다.

최근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당장 30일 발사된 탄도미사일 등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 속에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폐업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도 만들어야 한다. 광주 군 공학 이전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남권 의대 신설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여·야는 총선이 끝난 후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겠다'고 다짐했다. 22대 국회는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는 협치를 전제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탄의 대상이었던 특권들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막장'으로 평가되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

전남 랜드마크 만들어야 할 '전남형 트램'

오늘 전남도청서 토론회 개최

'전남형 트램'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가 3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전남형 트램'은 민선 8기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서남권 SOC 신(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번 토론회가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교통수단의 열개를 짜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전남형 트램'은 목포 구도심에서 하당, 남악 신도시, 오룡지구까지 총 16km로 원도심 주변 지역 명소와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전남의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전남도는 트램을 통해 관광뿐만 아니라 남악·오룡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폭 확대와 중심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5월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같은 해 6월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추정예산 3억원을 확보, 7월26일 본격 용역에 착수했다. 트램 도입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으며, 최적 노선 및 적정 차량시스템 도입 및 경제성(B/C) 분석 결과는 오는 2025년 2

월쯤 발표된다.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트램은 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다. 당장 트램은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 돼 디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비해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비교적 적은 에너지로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어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다. 도시의 상징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가치도 크다. 유럽과 호주 미국 등 수많은 대도시가 트램을 도시 교통의 중추적 수단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다. 트램이 설치되기까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부터 국토교통부 승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4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을 전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도로와의 조화나 건설 후 유지와 운영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효율적인 트램 건설은 전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대적 소명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9일(현지시각) 아이슬란드 레이카네스 반도 그린다비크의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분출되면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아이슬란드 당국은 용암이 약 50m 높이까지 분출했으며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AP/뉴스시스

서석대

"바다는 마치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친절하고, 때로는 무자비하며, 항상 무한하게 강하다." 소설 '노인과 바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게 바다는 삶의 원천이면서 경외의 대상이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쿠바의 바닷가에서 보낸 헤밍웨이. 망망대해에 나가 거대한 물고기와 싸운 어부 산티아고를 통해 그는 바다를 광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인간의 강인함과 의지를 시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나에게 바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성찰을 자극하는 근원이었다."는 게 헤밍웨이의 회상이다.

육당 최남선에게도 바다는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 190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잡지 '소년'에 쓴 시에서 "큰 것을 보고자 하는 자/넓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기운찬 것을 보고자 하는 자/큰기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는/가서 시원한 바다를 보아라."고 했다. "철·석·처일씩 척·좌·아/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태산 같은 높은 뿔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치면서/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로 시작하는 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는 웅혼한 바다를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희망의 바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의 물 96.5%를 품은 지구 생명체의 시원(始原)이다. 육지 생물의 7배에 이르는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가 담겨있고 어업, 관광, 선박 운송 등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바다를 두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영국의 모든 승리는 바다와의 강력한 연결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제국의 힘의 원천이야말로 바다의 활용에 있었다는 의미일 게다.

31일은 29회를 맞는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이날 해양수산부는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전남일보도 이날 목포시와 함께 영암금호방조제에서 바다살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내달 4일에는 신안군과 자은 둔장해변에서 바다살리기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 바다의 날 주제인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처럼 바다는 인류의 희망이다.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도 달려 있다. 바다의 날인 오늘 하루라도 삶의 원천이면서 경외의 대상이라는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길 일이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